

서울 무상급식 24일 결판난다

市, 주민투표 발의...단계·전면 실시 중 택일

민주당·서울시교육청 법적 대응 결과 주목

유래 없는 수해 피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일을 오는 24일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복지포플리츠추방국민운동본부가 청구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1일 공식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민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는 이번이 국내서 처음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등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투표로 실시된다.

주민투표에 부처진 사항은 투표 실시결과 주민투표결과 총수(836만명)의 3분의 1 이상(약 278만명)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반발했다.

허광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세훈 서울 시장은 (폭우 피해로) 고통받는 강남주민을 위해 헛되이 낭비하는 주민투표 비용 182억원을 하루속히 사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들도 "주민투표에 182억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오 시장의 권력욕심에 따른 독선적인 아집"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우선 대규모 수해 이후

실시될 것이어서 수해가 변수로 작용할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또 야당 측이 '투표 저지' 입장 아래 다양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여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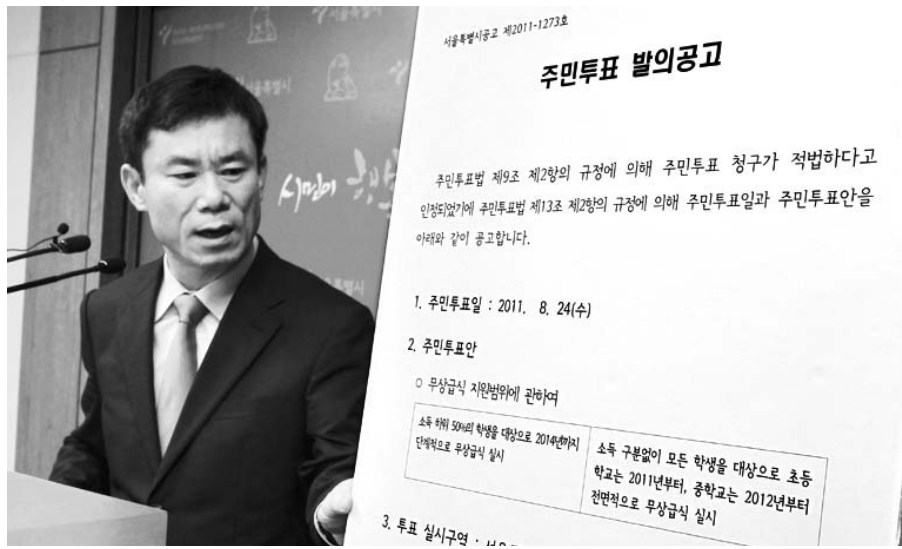
민주당 측은 우선 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 재결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냈으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이번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명백한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법 2조 2항에서 '재판 중인 사안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민주당 측은 또 현행법상 무상급식 사업의 주체는 교육감이어서 주민투표 절차를 오세훈 시장이 아닌 광노현 교육감이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광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법적으로 바로잡는데 필요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확신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야당 측이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도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 측은 "주민투표 청구 수리를 수리한 것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 측은 "청구 수리는 애초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주민투표일인 이전인 16일을 전후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발의를 공고한 1일 서울 중구 서소문 서울시청에서 이종현 대변인이 '주민투표 발의공고'를 발표하고 있다(위). 아래는 이날 오후 서울 중로구 현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서류를 접수하고 있는 송병춘 서울시 교육청 감사담당관. /연합뉴스

서울시가 확정된 투표 문구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지만 야 5당은 서울시의 무상급식안과 민주당 측 안 모두 '단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 확정된 문구는 시민의 의사를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영업정지 저축은행 7곳 6년간 7500억 손실처리”

희망연대 김정 의원 “늑장 구조조정이 부실 키워”

올해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대손상각액이 6년간 7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저축은행개혁조사특별위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를 비롯해 7개 저축은행의 대손상각액은 2005~2010회계연도 기준 7517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손상각액은 2005년 871억원에서 2006년 1409억원, 2007년 2109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08년(1585억원)과 2009년(1025억원)에도 1000억원을 웃돌았다.

저축은행별로는 부산저축은행이 2186억원, 부산2저축은행이 20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전저축은행 1874억원, 전주저

축은행 861억원, 보혜저축은행 306억원, 도민저축은행 184억원, 중앙부산저축은행 92억원 순이었다.

특히 부산·부산2저축은행은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이전에도 2005년 715억원, 2006년 1048억원, 2007년 896억원을 각각 대손처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08년 대전·전주저축은행 인수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가속화한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산저축은행 부실이 이미 심각한 상태였다”며 “당국의 늑장 대응이 부실을 키운 것으로, 2008년 이전에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단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한진중 사태 해결 대통령이 나서라”

손학규 대표 “5대 의혹 조사 특위 구성할 것”

민주당은 1일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것을 촉구했다.

한진중공업 사태가 8개월이 지나며 장기화되고 있고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세 차례나 희망버스라는 이름의 원정시위를 벌였지만 좀처럼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큼 국정 최고책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서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 때가 됐다”며 “일본 국회의원의 울음도 방문을 막는 것도 대통령의 일이지만, 그보다 못하지 않은 것이

한진중공업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이 문제가 이제 노사협상이나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 백일하에 드러나는데도 대통령도, 총리도, 경제부총리도, 노동부장관도, 노사위도 책임있게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해외로 도피한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에 대한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고 비판한 뒤 조 회장의 행적과 조세피난 의혹 등을 포함한 ‘5대 의혹’ 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 방침을 밝히면서 그의 귀국을 압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일을 확정하자 한나라당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나선 반면 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1일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함에 따라 지원 방안을 본격 모색하고 나섰다. 지난날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키로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지역에 집중된 폭우 피해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저하는 분위기도 있으나 민주당과의 ‘무상복지’ 승부에서 밀릴 수 없다는 판단에 대해선신을 다하기로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수해 문제와 무상급식 투표를 별개”라며 “재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뒤에 무상급식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

한나라, 당차원 적극 지원 민주, 투표율 낮추기 총력

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우선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주민투표 지원활동에 착수하되 필요에 따라 중앙당 차원에서 뒷받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민투표법을 저촉하지 않으면서도 ‘전면 무상급식 반대, 단계적 무상급식 찬성’에 대한 여론을 제고, 주민투표를 승리로 이끌 묘안을 짜내는데 골몰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무상급식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중앙당의 지휘 아래 야권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조해 주민투표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물론 투표 불참 운동 등 실효성 있는 대책도 전개할 방침이다.

무상급식이 주민투표의 벽에 가로막히게 되면 내년 총선과 대선의 핵심공약이 될 무상급식·보육·의료와 반값등록금 등 ‘3+3

보편적 복지’ 구상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격양된 수해 민심을 등에 업고, 수해 책임 논란을 빚은 오세훈 서울시장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물난리와 중에도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강행한다고 한다”며 “지금은 서울시민의 분노를 부추기는 주민투표를 강행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무상급식 사수를 위해 투표 불참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투표에 나서 반대표를 던지는 것보다는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도록 해 주민투표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보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행안위 5일 수해대책 회의 뭉치장 참석 논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중부권 기습폭우의 원인과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참석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회의에는 행안부, 소방방재청 등 재난 담당 기관이 참석하며, 행안위원들은 소관 기관으로부터 기습폭우의 원인과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

해주민에 대한 보상비 지원 등의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참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다.

민주당은 서울시 수해의 직접적인 책임이 오 시장에게 있는 만큼 오 시장을 출석시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공대라고 일축하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우연산 사태의 책임은 오 시장에게 있다”며 “특히 지역단위 소방본부의 광역단체 소관이기 때문에 오 시장이 출석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1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사업이란?
일반주택,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국민적 이용을 확대하여 관련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태양광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며, 기술발전 등을 통한 중장기 수출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준가구용(사용전력량 kWh)별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요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가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보급 상담문의 ☎062-512-1180/ H.P 011-659-7001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메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주의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덤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부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